IF Report

2016-01

4.13총선 정당별 주요 공약패키지 분석①

불평등과 사회격차

김철희 연구실장

(재)더미래연구소

IF 더미래연구소
KOREA INSTITUTE FOR THE FUTURE

차례

들어가며 — 1

정당별 불평등 해소 공약 패키지 : 주요 내용 — 3

1. 새누리당 — 3
2. 더불어민주당 — 5
3. 국민의당 — 7
4. 정의당 — 9

정당별 불평등 해소 공약 패키지 : 평가 — 13

1. 새누리당 — 13
2. 더불어민주당 — 15
3. 국민의당 — 16
4. 정의당 — 17

맺으며 — 19

들어가며

※ 4.13총선이 시작되었다. 이번 선거는 20대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다. 또한 총선 결과는 박근혜정부 하반기 정치지형 재편과 직결되어 있고, 2017년 대선지형의 정당별・후보별 유불리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각 당이 구사하는 선거전략이 초반부터 불꽃을 튀기며 부딛치고 있고, 여의도에는 사뭇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치권과 정치권을 비추는 언론은 흔히 후보결정과정이나 그 결정과정에서 드러나는 갈등 양상에 집중한다. 인물집단의 조합방식이 결과적으로 향후 벌어질 정치현실에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오래된 정치권 내의 경험칙이 작용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선거를 준비하는 각 정당의 공약패키지라 할 것이다. 선거라는 압축적 정치공간에서 공약은 국민들의 평가와 지지 그리고 비판과 반대를 형성하는 효과를 낸다. 상당수의 유권자들은 그 공약을 기준으로 선거에서의 지지를 공고히 하거나, 지지정당을 변경하기도 한다. 득표력을 가진 정당의 공약은 선거 이후 원구성 초기에 제출되는 이른바 "당론법안"의 기본틀이 되고, 자연스럽게 전반기 국회의 논쟁구조로 연결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정당이 어떤 컨셉으로 정책패키지를 구성하고,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것인가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재)더미래연구소는 이번 4.13 총선을 맞아 각 정당이 제출한 주요 공약들을 패키지 차원에서 비교평가하면서 20대 국회 전반기 이슈지형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특히 불평등, 청년, 경제성장 등과 같이 사실상 비등점에 다다른 주요 이슈들에 대해 각 정당이 어떤 입장을 제출하는지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이슈들의 연원과 전망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전개될 정치질서 재편과정에 대한 해석과도 맞물리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이번 20대 국회 선거구도가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한 2015년 하반기부터 다수의 전문가들은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관통할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불평등"을 들었다. 이미 2000년대 초중반부터 감지되어 오던 소득불평등이 이제는 더 많은 사회적 문제로 전이되고 있고, 최근 등장한 이른바 "수저계급론"이 의미하는 것처럼 현저한 계층간 차별문제와 계층이동의 부자유성의 문제는 공동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동체 운영의 "정의"를 의심케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결국 이런 사회적 논쟁이 압축적으로 벌어지고, 그에 따

른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의 선거에서 정치권이 어떤 해법을 내 놓는가에 따라 앞으로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주체가 결정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 실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15년 10월 한 초청특강에서 "(지금 우리의) 시대정신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저는 단연코 우리 사회의 격차해소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 70%는 '한국의 자본주의는 진정한 자본주의가 아니다' 라고 대답한다" 고 말해 작금의 불평등의 현상을 "사회격차" 라는 방식으로 개념화 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12월 8일, 여의도연구원이 발표한 「2016 총선 시대정신 조사보고서」에서 "국민은 경제성장보다는 복지국가와 사회격차 해소를 더 중요하게 꼽고 있다" 는 내용을 담으면서 보수정당을 표방해 온 새누리당의 인식변화를 보여준 바 있다.

-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도 문재인 대표가 주도적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을 제기하면서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득확대와 내수시장 강화를 통한 성장론의 전환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당 정책연구원을 통해 구성한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 는 기존의 소득주도성장론, 분수경제론, 공정성장론등을 조정-통합한 「더불어성장론」을 제출하기도 했다. 정의당 또한 이와 같은 논지에서 「정의로운 경제론」과 같은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과 정책적 대안을 제출했다.

- 본 보고서는 20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이 기존에 주장해 오던 불평등해소방안을 총선국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 하고 있는지, 나아가 그와 같은 공약패키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상호 대별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후 20대 국회가 개원된 이후 각 정당이 어떤 방식으로 초반기 입법경쟁과정을 기획해 나갈 것인가까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예측분석의 의미도 함께 담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당별 불평등 해소 공약 패키지 : 주요 내용

1. 새누리당

- 새누리당은, “새누리의 공정 곱하기: 차별과 격차 해소 통한 공정사회 구현” 이라고 이름 붙인 사회적 격차해소 공약을 제출했다. 새누리당이 “불평등” 이라는 개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회격차” 라는 기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정하게 언어적 순화를 통해 지지층의 거부감을 최소화 하면서 동시에 현정부가 시행해 오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대안의 강도를 조정하려는 태도에 기인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새누리당의 개념정립이 현재 유권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불평등 문제의 무게감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는 또다른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

- 새누리당은 실질적 격차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상생협력의 강화” 를 제시하면서 이를 위한 실청방안으로는 「희망사다리」, 「불공정타파」, 「대중소 상생협력 강화」를 각각 제출하고 있다.

새누리당 「차별과 격채해소 통한 공정사회 구현」공약 개념도

*출처 : 새누리당 보도자료 (2016.3.1.)

- 「희망사다리」는 이른바 사회적 격차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묶어 이름 붙인 정책 패키지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재직자의 국비유학기회 확대로 흙수저 타파, ▲저소득층 영재 발굴확대로 계층이동 사다리 구축, ▲EBS 2TV(교육방송) 조기 실시로 사교육비 대폭 절감, ▲한국형 무료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서비스 활성화, ▲마이스터고 활성화 및 전문대학 특성화, ▲취약근로자의 직업훈련 지원 확대(비정규직·청년 등에 대한 훈련지원비 증액 및 응시료 지원) 등이 있다.

- 「불공정타파」는 고용분야와 중소영세상인의 거래질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정부의 정책운용 방향성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있다. 구체적으로는 ▲임금체불 원천봉쇄(임금체불 사업주 제재강화 및 기초고용질서 확립), ▲인사청탁 근절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공공기관 인사 투명성 제고),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근절로 투명성・접근성 제고, ▲국민 체감의 가맹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활동을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들이다. ▲중소기업 초기 제작자금 지원 원활화(납품 전 발주계약 근거로 자금을 지원하는 시스템 신규 도입), ▲성과공유제 확산으로 상생협력기반강화(2020년까지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500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새누리당 불평등 공약 세부추진계획

분야	공약	세부 추진계획
희망 사다리 구축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재직자의 국비유학기회 확대로 흙수저 타파!	- 저소득층 학생 및 중소기업 3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국비유학생 선발기회 확대 - 석·박사 취득 기간 동안 약 2,3년 학비 및 생활비 지원
	저소득층 영재 발굴 확대로 계층이동 사다리 구축!	- 맞춤형 진단검사 지원 등을 활용하여 영재교육 소외자 선발 확대 - 교사 관찰 추천제 내실화 - 기초연구 추진 및 과도기적 프로그램 지원 확대(Bridge 프로그램) - 단계적 영재교육 지원
	EBS-2TV(교육방송) 조기 실시로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제공!	- 무료로 제공되는 지상파 EBS-TV(교육방송)의 채널 한 개 더 추가
	무료 온라인공개강좌 서비스로 맞춤형 고등교육 제공!	- K-MOOC 개설 강좌를 확대 - 다양한 이수결과 활용 방안 마련
	마이스터고 활성화 및 전문대학 특성화로 기업형 인재 맞춤양성!	- 대기업, 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맞춤형반을 전체 기업맞춤형반의 10%까지 확대 - 기존 제조업 중심의 '취업맞춤반'에서 회계 등 사무직, 서비스, 농생명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 전문대학의 특성화를 지원
	취약 근로자의 직업훈련 지원 확대!	- 취약근로자 훈련지원비를 연간 100만원씩 증액(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 취약 청년계층(15~34세) 자격증 취득 시, 응시료 지원

불공정 타파	악덕사업주 갑질 근절! 임금체불 원천봉쇄로 근로약자 보호!	-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처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확대 추진
	인사청탁자 명단 공개로 반칙 없는 공정사회 구현!	- 해당 기관 메인 홈페이지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 청탁자 정보 및 위반내용 공개 - 관련 법 개정으로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기명란법 등)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 근절로 투명성 · 접근성 제고!	- 자의적인 계약 집행소지가 없도록 「국가계약법」 적용대상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 공공기관에 대한 조달청 의무위탁대상 확대
	가맹점 울리는 불공정 행위 근절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중소 기업 상생 협력 강화	중소기업 초기 제작자금 지원 원활화!	- 상생협력 차원에서 대기업(발주기업), 금융권(보증기관, 은행), 중소기업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납품 전 자금지원 시스템 도입 - '발주계약 기반 자금지원 시스템'을 도입하는 대기업에 대해 동반성장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여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
	성과공유제 확산으로 상생협력 기반 강화!	- 다자간 성과공유제를 활성화 - 1차뿐만 아니라 2·3차 협력기업도 성과공유제에 적극 참여하여 원가절감, 기술력 향상 등 기업의 경쟁력 제고

*출처 : 새누리의 공정 곱하기 차별과 격차 해소 통한 공정사회 구현

2.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은 일찍부터 한국사회의 양극화에 대한 대안으로 대안적 성장론을 제출해 왔다. 특히 2014년부터 당 내부적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임금주도성장(Wage-led-growth)을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소득주도성장론을 다듬어 오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 그 사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소득주도성장론, 공정성장론, 분수경제론 등 다양하게 이름 붙여진 불평등 이슈에 대한 대안적 성장론이 제출되면서 논의되어 왔다. 대부분 대선 주자급 후보들의 경제정책 아젠다였는데, 문재인 대표가 주도한 당내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가 이와 같은 대안적 경제론을 통합하여 「더불어성장론」을 제시한 바 있다.

- 더불어성장론은 크게 「공정경제」, 「선도경제」, 「네트워크경제」 영역으로 구성되고, 각 영역은 다시 개별과제로 세분화 되어 있다. 「공정경제」는 ①청년일자리 70만개·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 5만호 제공을 통해 청년경제 활성화, ②동일노동·동일임금 및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제를 묶은 비정규직 차별철폐, ③최저임금인상·생활임금 확대·적정임금제·임금분포공시제 등의 임금정책을 묶은 소득불평등 완화, ④이익공유제 전면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을 통한 공유가치창출 등의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도경제」는 ① 핵심 신산업분야 집중육성을 통한 미래산업 선점, ② 과학기술부총리·중소기업 R&D특별회계를 통한 혁신 중소기업 육성, ③ 남북경협을 통한 성장률-일자리 정책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트워크경제」는 ① 국가전략산업 클러스터-국토균형발전시도지사협의

회-국토균형발전차관(次官)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국토균형발전, ②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③ 국가먹거리 플랜과 공공기관 친환경 급식확대를 포함하는 도농상생 정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성장」개념도

더불어성장	공정경제	① **청년경제활성화** — 청년일자리 70만개,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 5만호 제공 ② **비정규직 차별철폐** — 동일노동 · 동일임금 사유제한제 도입 ③ **소득불평등 완화** —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확대, 적정임금제,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④ **상생협력을 통한 공유가치창출** — 이익공유제 전면확대
	선도경제	① **미래산업 선점** — 핵심 신산업분야 집중 육성 ② **혁신중소기업 육성** — 과학기술부총리 · 중소기업 R&D특별회계 ③ **한반도 신경제지도** — 남북경협을 통한 성장률제고와 일자리창출
	네트워크경제	① **2차 국토균형발전** — 지역특화 국가전략산업클러스터 집중지원, 국토균형발전시도지사협의회 및 국토균형발전차관신설 ②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③ **도농상생** — 푸드플랜 전국 확대

*출처 : 더불어성장보고서(2016.2.1.)

- 이번 총선에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양극화 해소 공약으로 "777플랜(쓰리세븐플랜)'을 내세웠다. 이는 GNI대비 가계소득 비중 70%(現 61.9%), 노동소득분배율 70%(現 68.1%), 중산층 비중 70%(現 65%)와 같은 목표수치를 의미하는 슬로건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위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불평등해소위원회'를 설치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 총괄조정 및 777플랜 구체운용, ▲현재 재벌대기업 중심 '나홀로 성장'에서 중소기업 · 중산서민과 '더불어성장' 틀로 구조개혁,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체계에서 임금증가분에 가중치를 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가계소득 증가 유도,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의 확산 및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이익 증대, ▲노동자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① 생활임금제 확산 ② 최저임금(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③ '비정규직 사용부담금제' 도입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 최대 1,200만원(1인) 지원 ④ 3同원칙(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 법제화, ▲재벌총수일가의 「꼼수 연봉 공개」 방지를 위해 보수 공시제도 개선, ▲계층 간 교육기회 격차 완화 위해 대학등록금에 대하여 저소득층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및 환급, 장기적으로는 '소득연계형 등록금제도' 도입 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777플랜으로 양극화 해소」공약별 추진계획

분야	공약	세부 추진계획
불평등해소 위원회 설치	정부정책 총괄 조정	- 777플랜 최우선 국정과제 추진 - 중장기 5개년 계획
더불어 성장 경제로 구조 개혁	고용창출 및 소득주도형 성장전략인 '더불어성장'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성장과 분배	- 현정부의 수치중심 양적성장의 한계 극복, 재벌 대기업 중심의 '나홀로 성장체제'로부터 전환 -「더불어성장」을 통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 - 국제적 흐름인 '포용적 성장' 전략 채택
가계와 기업 간 소득배분 시스템 개선	기업소득 증가가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마련	- 현재 시행중인 기업소득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에서 임금증가에 대해 가중치 부여하여 노동소득분배율 높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의 완화	-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 시행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 - 성과공유제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방안 검토
소득계층 간 소득배분구조 개선	노동자 간 임금 격차 완화	-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증가를 위해 지자체 주도 생활임금제를 전국적으로 확산, 관련 민간기업 노동자까지 적용 유도 - 최저임금(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연평균 13.5%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 - 일정비율 이상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 최대 1,200만원(1인) 확대 - 1년 미만 근속자들에게 퇴직급여 적용 등. - 3동 원칙(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 법제화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 - 재벌총수일가의 「꼼수 연봉 공개」 방지를 위해 보수 공시제도 개선 추진
	계층 간 교육기회 격차 완화	- 중산층 ·서민 학부모의 고통인 대학등록금에 대하여 저소득층 대상(예: 소득 3,600만원 이하)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및 환급(현 교육비 세액 공제와 중복지원 배제) - 소득하위 계층에 대하여 장학금 제도와 별개로 소득비례로 수업료를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 도입 검토

출처 : 더불어민주당, "777플랜(쓰리세븐플랜)으로 양극화 해소"(2016.03.02.)

3. 국민의당

- 국민의당은 창당으로부터 현재까지 활동기간이 길지 않아 구체적인 당의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책아젠다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다만 당의 '강령 및 기본정책' 전문에 "국민대중의 삶이 피폐해지는 위험 사회에서 국민의당은 생산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공정성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증가하는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고 규정하고, 제1장 제1절에 "우리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인 경제역동성을 회복하고 붕괴하고 있는 중산층을 재건하기 위해 시장의 불공정성과 왜곡된 분배 및 재분배 구조를 개혁하여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을 해소할 것이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불평등해소를 당론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 현재까지 국민의당은 불평등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공약패키지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다만 내용면에서 볼 때 2016. 2. 23 발표한 중소기업 공약과 2016. 2. 29. 발표한 노동공약을 통해 일부 관련 공약들을 추출해 볼 수 있다.

- 국민의당의 중소기업 공약 중 「갑질방지」 항목은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발생하는 기업소득 간 격차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성과공유제 활성화와 상생법 개정을 통한 이익공유제 도입, ▲유통분야 불공정 개선을 위한 입찰내용 및 결과 공개, 공정위 고발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범위확대 등을 포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당 「힘든 중소기업을 히든 챔피언으로」 공약 세부추진계획

분야	공약	세부 추진계획
갑질방지	이익공유제 도입	- 대기업과 중소기업 성과공유 활성화, 상생 촉진. 현행 상생법 8조 개정, '이익공유제' 도입 세제혜택
	하도급 및 유통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 하도급 및 가맹사업 MRO(소모성자재구매)를 포함한 유통분야의 불공정행위 개선하기 위해 입찰내용과 결과를 공개 - 피해자가 他 조사기관에 고발 및 고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대상 확대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수출확대를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하여 분산된 수출기능지원 통합을 통해 효율성 높임. - KOTRA를 중소기업 수출 전문지원 기관으로 개편

*출처 : 힘든 중소기업을 히든 챔피언으로; 일자리와 격차해소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 국민의당이 발표한 「일자리와 격차해소」 공약은 노동분야와 관련된 공약이다. 세부적으로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90%의 미조직 노동자의 이익대표기구로 노동회의소 설립, ▲기간제, 파견, 용역근로자의 자기부담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으로 확대, ▲상시직속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 후 교체사용 시 6개월 채용금지기간 부여, ▲하도급법 제18조에 인사노무관리 사항을 포함하고 위반시 불법파견으로 간주, ▲공공기관이 근로자파견업 직접 시행하여 파견수수료 인하, ▲원사업자 회생절차 시 공사대금 포함된 임금을 공익채권으로 간주하여 하도급근로자 임금보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2016. 3. 25. 국민의당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의하면 일자리 분야에 ▲공정임금법 제정, 임금정보공개요구권, 차별임금여부의 사용자 입증책임 전환, 적정임금제 도입 등을 포함한 임금정책을 추가하고 있다.

국민의 당 「일자리와 격차해소」 공약 세부추진계획

공약	세부 추진계획
노동회의소 설립 검토	- 기업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공회의소'에 대칭되는 '노동회의소' 설립, - 비정규직을 포함한 90%의 비조직화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 설립 검토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 기간제,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들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사용자(파견과

사용자 부담	용역의 경우 해당 사업장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함.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도입	- 5년간 한시적으로 5% 청년고용할당제(정규직)를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으로 확대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 기간제 사용 휴지기 도입	-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후 동일 업무에 다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대체인력 6개월 간 채용 금지
불법파견 및 불법사내하청 방지: 하도급근로자 보호	- 하도급법 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에 인사와 노무관리를 포함하고 이를 위반 시 불법파견으로 간주하여 고용관계는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도록 함.
파견근로 수수료 인하	- 민간업체 중심의 파견근로자공급사업은 파견근로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하여 공공기관이 파견근로자 공급사업을 하도록 하고 행정비용만으로 파업사업 시행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확보	- 원사업자의 회생절차 시 하도급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공익채권으로 분류
공정임금 도입	- 공정임금법 제정 - 성별 등에 따른 임금차별금지 및 공정임금을 위한 임금정보 공개 요구권 도입 - 임금차별 입증책임 사용자부과 - 정부발주공사에 대한 적정임금 도입

*출처 : 일자리와 격차해소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4. 정의당

- 정의당은 진보정당 답게 오래 전부터 소득불평등문제 대안마련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왔다. 정의당은 기존의 논의를 묶어 2016. 2.「정의로운 경제론」을 공개했다. 정의로운 경제론은 '경제민주화'와 '사회연대'의 실천과제를 토대로 "소득주도성장전략", "정의선진복지전략", "미래녹색평화성장전략"의 3재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정의경제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 정의당은,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가계부채 해소, 불공정거래 근절 등의 과제를 경제민주화 과제로, ▲노동시간 단축,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청년고용의무제, 사회적경제활성화 등을 사회연대 과제로 각각 상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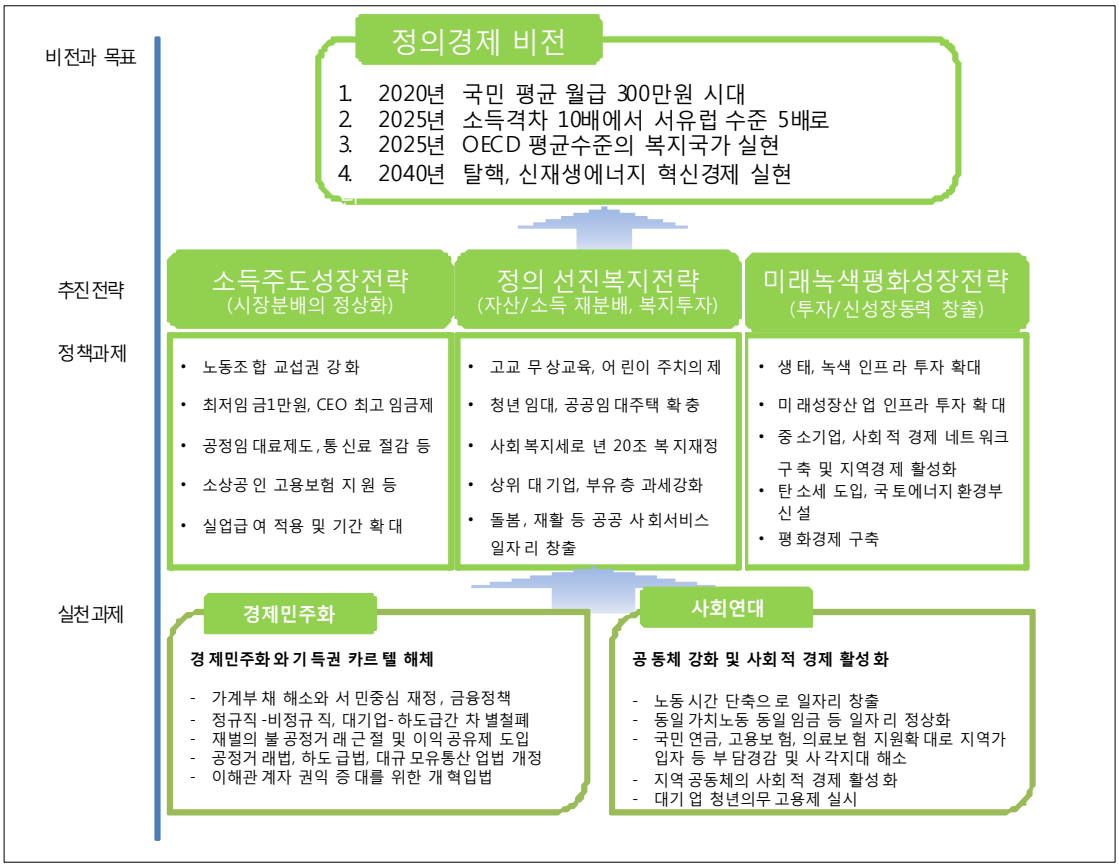
- 아울러 3대 전략으로, ▲노조교섭권 강화, 최저임금 1만원, CEO최고임금제,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등을 통해 시장분배의 정상화를 이끄는 소득주도성장전략, ▲고교무상교육, 청년임대주책 확충, 대기업 및 부유층 과제 강화 등을 통해 자산과 소득배분배 및 복지투자 재원을 확충하는 정의 선진복지전략, ▲녹색인프라투자 확대, 미래성장산업 인프라 투자확대, 탄소세 도입, 평화경제 구축 등을 통한 미래녹색평화성장전략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 이러한 전략을 통해 정의당은 ① 2020년 국민평균임금 300만원, ② 2025년 소득격차 5배차 수준으로 감축, ③ 2025년 OECD평균수준 복지국가 실현, ④ 2040년 탈핵 신재상에너지 혁신경제 실현이라는 4대 정의경제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 정의당은 정의로운 경제론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주체 형성 없이

경제민주화는 진척될 수 없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제성장론은 추진동력에 대한 관점이 빠져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비정규직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경제민주화 활동의 주체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 볼 부분이다.

정의당「정의로운 경제론」개념도



*출처 : 정의로운 경제론 해설자료(2016.2.17)

- 정의당의 총선공약도 이와 같은 정의로운 경제론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정의당이 제출한 불평등분야 공약은 크게 '일자리', '근로소득', '재벌개혁 및 을살리기' 등 3가지 분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먼저 일자리 공약인「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분야는 ▲간접고용차별금지,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파견법 폐지, 특고노동자 근로자성 인정 등으로 비정규직사용제한과 동일노동동일임금으로 일자리 정상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고용상한제, 고용공시제, 정규직 전환대상포함, 전환성과에 따른 세액공제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축 공약, ▲연장근로시간 제한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한 5시 칼퇴근법 도입 공약, ▲휴가 사용 확대를 위한 선진국형 연차휴가 한 달 도입으로 휴식이 있는 삶 공약,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감정노동자 보호공약, ▲공기업과 대기업의 신규정규직 5% 의무할당과 고졸·전문대·지방대·여성 등의 고용할당을 포함한 공기업 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와 기회균형채용 공약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근로소득과 관련된 공약인 「내 월급이 좋아지는 경제」분야는 ▲초과이익 공유제, 임금차별 금지 등을 통한 2020년까지 국민평균 월급 300만원 실현, ▲최저임금 1만원으로, CEO등 고위 임원 임금상한제, ▲초과이익공유제와 성별임금 격차 해소,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및 실업부조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재벌개혁과 '을'살리는 경제민주화 실현」분야는 대체로 재벌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열사간 순환출자 해소, 국민연금 공익적 의결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개선과 금산분리 강화, ▲시민단체 고발권과 당사자 권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재벌대기업의 갑질(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사익편취행위 근절과 조세포탈·횡령·배임행위에 대한 형량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재벌일가의특혜와 기득권근절, ▲갑질행위 근절, 초과이익공유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벌대기업 규제,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 지원과 육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의당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정책 중 관련공약

항목	공약	세부 추진계획
내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비정규직 사용 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일자리 정상화	- 간접고용형태도 차별적 처우 금지 - 기간제 사용 사유 엄격하게 제한, 원칙적 1년으로 제한, - 파견법 3단계 폐지 - 근로자 개념 확대로 특수 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공공부문 대기업부터 정규직 전환으로 비정규직 절반감축	- 2020년까지 OECD평균 수준으로 비정규직 감축 - 공공기관 간접고용상한제 - 간접고용 현황 공시제 도입 - 상시 지속적 일자리면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확대
	「5시 칼퇴근법」 도입으로 저녁이 있는 삶	- 주당 최장 68시간까지 연장 근로 허용한 탈법적 행정 해석 시정 - 근로기준법 독소조항 개정 - 「5시 칼퇴근법」도입 - 연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관련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법 - 하루에 한시간씩 더 일하고 주4일만 근무
	선진국형 연차휴가 한달 도입으로 휴식이 있는 삶	- 모든 노동자에게 연간 30일 이상 유급 휴가,공휴일 - 국경일 유급 휴일화 - 6개월 이상 재직 노동자 유급 휴가, 여름휴가 1주일 의무제 최소 2주 휴가제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감정노동자보호	-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 감정노동보호관련법제화
	공기업 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와 기회균형채용	-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대기업에 매년 정원의 5%이상의 청년 정규직 고용 - 청년고용인원의 일정 비율 고졸 이하,전문대 및 지방대 졸업자 등에게 할당, 여성비율도 30%이상 기회 균형 채용 제도
내월급이 좋아지는 경제	2020년까지 국민평균 월급 300만원 실현	- 비정규직 종합 대책을 통한 '좋은일자리' 보장 - 초과이익공유제 도입과 원하청 불공정거래개선 - 성별고용형태별 차별금지와 동일가치 노동동일 임금실현

	최저임금 1만원으로, CEO등 고위 임원 임금상한제	-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최저임금 결정 절차 개혁 - 공기업/대기업 CEO와 고위 임원은 최저임금 연동 임금상한제 도입
	초과이익공유제와성별임금격차해소	- 원하청 초과이익공유제 실시와 초과이익 공유시 세제지원 - 성별고용형태별 차별금지와 동일가치 노동동일 임금실현
	비정규직사회보험료지원확대및실업부조	- 사회보험료지원확대, -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및 지원기간확대 - 실업부조-구직촉진수당도입
재벌개혁과 '을'살리는 경제민주화 실현	재벌대기업의지배구조개선과금산분리강화	- 계열사간 순환 출자 해소, - 감사원 전원 분리 선출 및 소액주주 근로자 대표 추천 이사 선임, -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공익적 의결권 행사강화 -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및 제재 방안 강화
	재벌대기업의갑질(불공정거래)행위근절	- 징벌적조치 - 공익적 시민단체 고발권 부여 및 집단 소송제 - 소비자 보호 및 피해 당사자 권리 강화
	재벌일가의 특혜와 기득권근절	- 사익 편취 행위 근절 - 조세 포탈 횡령 배임 행위 형량강화
	재벌대기업규제,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지원과 육성	- 갑질행위 근절 - 사업영역진출규제 - 초과이익공유제 - 집단적교섭권보장 - 이익공유제 - 카드수수료인하 - 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료지원

*출처 : 정의당 10대 기본정책 중

정당별 불평등 해소 공약 패키지 : 평가

1. 새누리당

- 새누리당의 희망사다리 정책을 분해해 보면 일단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이 국비유학제도 확대제도와 영재교육 소외자에 대한 지원 확대다. 그 밖에도 교육방송 2TV조기실시나 한국형 무료 온리안 강좌(K-MOOC)활성화 등도 저소득층 교육기회 확대라는 동일기조 하에서 만들어진 공약이다. 이와 같은 새누리당의 「희망사다리」 공약은 현재의 불평등 또는 사회격차 세태를 말해주는 "흙수저" 를 없애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공약으로 읽힌다. 흙수저는 부모의 가난이 자녀에게 이전되면서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얻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비유학이나 영재교육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공약은 2016년 현재 저소득층 국비유학생 8명을 선발하던 것을 42명을 늘려 5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과 현재 연간 15명 정도를 선발하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국비유학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 그리고 영재교육 소외자 수혜율을 현재 2.46%에서 5.5%로 늘리겠다는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러한 새누리당의 공약은 근본적으로 한국사회의 불평등이 교육기회의 불평등에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그 기회를 확대해 해결하겠다는 구상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그 해법이 외국학교로의 유학을 지원하는 방식이나 영재교육 수혜율 증대 등의 방식이 과연 문제해결에 타당한 대안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상당하다.
  일부 빈곤층 자녀에 대한 국비유학의 확대(그나마도 목표치 연간 50명 수준)가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되리라고 공감할 사람은 극히 적어보인다. 수저계급론의 핵심은 더 나은 스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사회 내부의 보이지 않는 천정이 만들어져서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는 세태를 꼬집는 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방법은 '금수저' 를 능가하는 해외대학 스펙을 갖추어 특권층으로의 진입로를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에 만들어지고 있는 계층장벽을 허물어 특권층 형성가능성을 억제하고 보편교육강화와 공공과 민간을 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중산층확대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다른 정당들이 제출하고 있는 소득증대 정책이 새누리당의 공약 안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새누리당이 이 부분에 관한 공약을 마련하는데 다른 당과 다른 철학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새누리당이 불공정타파 분야에서 제출하는 공약들 중에 눈에 띄는 것은 "공공기관의 불공정계약 근절" 과 "가맹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 이 있다. 이는 19대 국회에서 야당들이 주력한 활동분야로 이른바 "갑질문화" 에 비판적 여론이 일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이 부분들 중 정부의 갑질행위 문제는 2015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졌던 문제로, 정부 스스로도 문제점에 대해 동의하고 해결을 약속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다

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구체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은 향후 이 정책이 얼마나 현실성 있게 집행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남기는 부분이기도 하다.

- 새누리당은 갑질의 대표적인 사안으로 임금체불을 들었다. 총선 직전인 2016. 3. 27.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을 대표적 '갑질'로 언급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도 여당과 정부의 일정한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나온 발표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새누리당의 임금체불 대책은 이미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야당이 제출한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부측의 대안으로 새로울 것이 없는 정책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증가원인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자기책임에 대한 평가없이 과거 매번 있었던 선거에서처럼 대중의 민간도가 높은 이슈인 임금체불문제에 대해 그냥 "책임지겠다"고 공약을 내놓는 것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알 수 없다.

- 새누리당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의 초기 제작자금 지원과 같은 금융지원정책과,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오던 성과공유제를 확산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내 놓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성과를 공유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대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들은 더민주나 국민의당과 같은 다수의 정당이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어 정치권 내의 동의기반이 넓은 정책이다. 그러나 지난 시기 정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정한 한계, 예를 들면 대기업 중심의 하청질서에 편입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면서 결과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하청질서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일부 대중소상생 프로그램이 하청기업에 대한 원청기업의 경영개입의 여지를 열어주면서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부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비판과 개선방향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 한편 새누리당이 제출한 주요 정책 중 "내수산업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육성"의 일환으로 "U턴경제특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은 사업규모의 10%이상을 국내로 돌리는 유턴기업에 대해 정착지원제도를 공약하면서 "유턴 경제구역을 한시적으로 최저 규제지역으로 운영 - 유턴기업 안정화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영장, 파견근로 허용"이라는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일종의 경제특구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이 일정한 지역 내에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는 새누리당이 오랫동안 추진해 온 규제완화 입법 방식이다. 특히 이 제도 안에 "기간제근로자 사용연장"과 "파견근로의 직종제한 해제"와 같은 내용은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과제의 주요골자이기도 하다. 결국 이는 총선 직후 유턴기업특구 설치에 관한 특별법 등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야당은 과거 이와 유사한 각종 경제특구법의 규제완화 조치에 반대하여 왔고, 이번의 유턴기업법 역시 이에 포함된 노동규제완화 조치의 입법 시 향후 확대입법을 경계한다는 차원에서 일정한 입법대치상태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 또한 새누리당은 성장률 목표치 3%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금융개혁 등의 조치를 통해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통

해 총량적 성장률 관리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결국 기존의 낙수경제론의 한계로 지적되는 성장의 혜택이 일부에 독점되는 현상을 개선하는 방향과 반대의 정책기조를 설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국내의 불평등 분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러 국제기구의 지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 과거 19대 총선이나 18대 대선에서 나온 최저임금 인상이나 기초연금 지급과 같은 소득증대에 관한 공약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19대 국회 내내 야당과 대립해 오면서 새누리당이 견지했던 정책태도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새누리당의 소득증대정책에 대한 소극적 태도가 이후 20대국회에서도 지속될 경우 이 부분은 이후 대선국면까지 정책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강봉균 전 장관이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다는 말이 나온 3월 23일 무렵 강 전 장관이 소득불균형과 중산층강화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다. 이는 그 이전에 제출된 새누리당의 공약에서 나타난 흐름과 일정하게 상반된 것으로서 이후 총선국면에서 경제심판론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이 높아질 경우 새누리당 내부적으로 강전 장관의 입을 통한 일정한 공약수정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인다.

2.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주되게 가계와 기업 사이에 기업에게 과중하게 쏠린 소득분배율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는 목표를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중산층을 확대하겠다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중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는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체계 수정, 성과공유제 확산 및 개선, 그리고 소득분배제도 개선 패키지를 들 수 있다.

- 먼저,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체계 수정은 과거 최경환 노믹스로 알려진 정부의 과세체계를 일부 손 보는 것으로 다른 요소보다 임금증가분과 가중치를 두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전히 사내유보금을 현금화 하여 배당하거나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기업의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인상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넘어서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현재 다단계 하청구조로 이루어진 국내 기업구조 하에서 임금상위 10%구간의 임금소득이 1995년 대비 260배 증가한 반면 하위 70%구간에서 사실상 정체현상을 보이는 것과 같이 임금분야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선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과도한 이익독점상태를 해소하고 이를 하위기업이나 그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정책만으로는 일정한 한계를 노정할 수 밖에 없다고 평가된다.

-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성과공유제 확산 및 이를 통한 중소기업의 이익극대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전시한 바와 같이 새누리당의 정책과 일정한 유사성을 보이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성과공유제 역시 현재의 제도를 확산시키겠다는 기본입장은 새누리당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 여당과 야당 모두가 이 제도의 확산을 공히 공약하고 있는 만

큼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성과공유제 확산을 놓고 여야간 정책적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성과공유제는 제도의 취지가 갖는 긍정성에 비해 아직 확산의 정도가 넓지 않은 원인을 찾아야 하고, 반면, 제도 자체가 갖는 일정한 한계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어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향후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다.

- 더불어민주당은 소득계층 간 소득배분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생활임금제 확대, ▲최저임금 1만원(2020년까지),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 ▲1년 미만 근속자들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 ▲3동(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원칙 법제화, ▲재벌총수일가 보수공시제도,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세액공제 및 환급, ▲소득연계형 등록금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대체로 "임금+비정규직+교육지원" 을 패키지로 묶어 소득분배제도 개선을 위한 공약화 했다.
  생활임금제는 지난 지방선거 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약화 한 것으로 현재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 공공부문의 임금을 인상해 민간으로까지 그 효과를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로 일정한 성과를 얻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현재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제도가 일률적이지 않고, 근거법률이 되는 최저임금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제도시행을 위한 몇 가지 조치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제는 새누리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이 대부분 인상을 공약하고 있다. 다만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는 최저임금 심의를 국회가 개입하기 위해선 입법적 개선조치들이 필요한데,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내내 이 부분에 대해 반대입장을 냈고, 이번 총선 공약에도 관련 내용이 보이질 않아 향후 공약실현과정에서 일정한 난항이 예상된다.

- 비정규직 사용부담금제는 비정규직을 다수 사용하는 기업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시행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비정규직을 채용한 기업이 아닌 "사용" 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비정규직의 남용에 따른 문제를 일정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공약을 제도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교육기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등록금 세액공제와 소득연계형 등록금제 등도 폭발력이 있는 제도로 보인다. 이는 새누리당의 직업훈련과 해외유학 지원 위주공약과 상반되는 공약이라는 점에서 향후 논쟁이 예상되는 부분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3. 국민의당

- 국민의당은 아직까지 별도로 불평등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어 분산된 공약들 중에서 관련 내용을 선별해 보아야 했다. 일단 국민의당이 제시한 공약은 중 중소기업 분야에서 이익공유제,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불평등 공약으로 선정해 볼 수 있다. 새누리당이 공정한 시장 규칙 확립을 중심으로 성과공유제를 다루었다면, 국민의당은 중소기업 지원방안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정당간의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볼 수 있다.

- 국민의당은 일자리 공약 분야에서 격차해소를 언급하고 있다. 일자리 공약 중 몇가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먼저 ▲노동회의소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온 노동자 이익단체로서의 노동조합을 대체하는 방안이다. 비조직부분 대표조직으로 노동회의소를 만들고 상공회의소와 같이 이익집단으로 활동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공약은 현존하는 노동조합의 가입율을 제고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주도형 관제 노동기구를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럴 경우 노사자율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문제로 확산될 수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가 추가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 ▲비정규직 사회보험료의 사용자부담 방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율이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공약으로 보인다. 특히 비공식노동 부문에서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사회보험 혜택을 입으면서 정작 자신의 급여소득에서 사회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그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럴 경우 절대적으로 임금결정교섭력이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연적인 임금상승을 압박하는 효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부담으로 우회하게 되는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면서 제도의 취지를 살릴 것인지는 엄밀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근로자파견업 실시에 관한 공약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파견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공인된 기관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이 간접고용을 늘리는데 직접 기여하게 된다는 문제와 간접고용 노동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존 민간사업자들과 경쟁해서 공공기관이 효과적으로 근로자파견비율을 높일 수 있는지 여부 등의 문제가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공약으로 평가된다.
  ▲임금제도와 관련해 국민의당이 추가한 공정임금공약은, 임금정보공개 요구권과 차별임금의 입증책임의 사용자 부과, 적정임금제 정도를 핵심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임금정보의 실체가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역시 불분명한 점이나, 입증책임의 사용자 전환은 수긍이 가지만 현재 임금차별에 대한 분쟁해결제도 자체에 비정규직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있는 대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적정임금의 경우 이른바 더불어민주당의 "직방임금" 과 차별성을 갖는 제도인지 아니면 같은 제도인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는 것이라는 점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아울러 생활임금이나 최저임금인상과 같은 분야의 임금정책이 보이지 않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하겠다.

4. 정의당

- 정의당의 불평등관련 공약은 다른 정당들에 비해 볼 때 대체로 노동관련 공약과 재벌개혁으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정의당의 불평등 공약이 이처럼 노동공약 중심으로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마련되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거시경제정책이나 산업정책적 공약은 그리 풍부해 보이지 않는다는게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 정의당의 일자리 공약은 파견법 폐지, 특고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기간제 엄격화 등 전통적인 공약들과 함께 간접고용 상한제, 5시 칼퇴근법, 하루에 한시간 더 일하고 주4일 근무, 휴가제 확대 등 아이디어가 빛나기는 하지만 공약을 실제 실행으로 옮길 수 있을지 의심하게 할 공약들도 눈에 들어온다.

- 소득공약 역시 최저임금 CEO최고임금상한제 등과 같인 획기적인 공약들이 분에 보인다. 전통적으로 노동권을 중시해 온 야당답게 차별금지와 비정규직 지원 확대 등의 공약에 힘을 실은 것이 드러나고 있다.

- 정의당은 정의로운 경제론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소득주도성장'을 키워드로 내세움으로써 정책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노동법적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향후 20대 국회에서 노동관계법 분야의 입법개정안으로 제출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맺으며

- 여야 각 정당의 공약과 정책들을 보면, 과거와 달리 한국사회의 불평등의 현실에 온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정치권이 일정하게 반응하고 있고, 각 정당별로 명확한 자기색깔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지난 19대 총선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 좌클릭 논쟁을 만들기까지 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분명하게 치고 그 내부에서 "가능한" 수준의 공약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적이다. 또한 집권여당답게 기존의 정부가 추진해 오던 정책과제들을 "확대"하거나 "강화"하는 수준에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 야당은 예전과 달리 불평등분야를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공약을 묶어 제출하고 있다. 정당마다 약간의 무게중심을 달리하고는 있지만 대체로 이 영역에서 노동권강화, 차별금지, 비정규직보호, 소득증대, 공정거래질서강화, 대중소기업 상생 등과 같은 정책과제들을 고루 거론하고 있다.

- 예전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는 야당이 경제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색다른 선거지형이 만들어지고 있다. 오히려 여당이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면 그 책임을 야당 발목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제정책적 실패는 이미 예전부터 예견되어 온 것으로 한국사회의 경제권력의 비대칭성에 그 이유가 기인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에서 제출한 각 정당의 공약은 대내/대외를 막론하고 발생하는 한국경제의 위기라는 큰 틀에서 한국경제의 질서 자체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이 제출되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20대 국회가 구성될 경우 일정하게 의석을 나누어 가진 각 정당들은 현재 공약들에서 보이는 정책적 간극을 그대로 국회 내에서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상당수의 문제들이 상당기간의 논의와 정치적 과정을 통해 입법으로 발전해 나가겠지만 기본적으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쉽게 합의에 이르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과적으로 이를 정무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원내교섭단체 대표단이 구성되는가 아닌가가 총선이후 대선까지의 논의과정을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 우리가 불평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2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지금의 불평등 때문이다. 과거에 비해 현재의 불평등은 더 폭이 커졌고, 불평등을 결정하는 요인들도 많아졌다. 더욱이 불평등이 상속되는 문제는 만인의 평등과 기회의 균등을 이상으로 삼았던 현대국가들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다른 하나는 미래의 불평등이다. 인공지능이 세계인의 눈길을 끌고 있을 때 사람들은 미래의 일자리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대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는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 경고하면서 "만약에 자동생산으로 만들어진 부를 나누지 않으면 테크놀로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불평등을 낳을 것이다"라고 했고 "로봇보다 무서운 것이 자본주의"라고까지 말했다.

결국 지금의 분배규칙을 그대로 두고 소수만이 소유가능한 생산방식을 채용한다면 그로부터 다가올 인류의 불평등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다.

- 결국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불평등이라는 주제를 논의하면서 본질적으로 지금까지 유용했던 분배의 규칙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한 지난한 논의를 벌여가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등장한 사회격차 내지는 불평등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이러한 유권자들의 불안감에 반응한 결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치권의 대안역시 단기적 수준에 머물러있다. 사실 이 문제를 우리사회가 좀 더 빨리, 그리고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해선 정치권이 그 역할을 맡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더 광범위하고 현실적인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선거가 그와 같은 주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것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더미래연구소 IF REPORT 2016-01

4.13 총선 정당별 주요 공약패키지 분석① 불평등과 사회격차

발행일 2016. 04. 01

발행처 (재)더미래연구소(이사장: 최병모)

Copyright ⓒ더미래연구소, 2016 ※본 자료는 더미래연구소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더미래연구소는 대한민국의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민간 독립 싱크탱크'입니다.
더미래연구소의 성장은 '후원회원'의 힘과 꿈으로 가능합니다.

150-8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902호(여의도동, 정원빌딩)

T: 02-785-2030, F: 02-786-2017, E: themirae2030@gmail.com

웹사이트: themirae.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themirae

블로그: blog.daum.net/themirae2030